

한국학, 한국어, 한국어교육*

전상인**

< 次 例 >

- I. 문제의 제기
- II. 국내 한국학의 '민족 만들기'와 '근대 찾기'
- III. 한국학과 한국어 문학
- IV. 한국어와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미래

I. 문제의 제기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사실 이외에 따로 내세울만한 교양이나 지식이 전무(全無)한 입장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한국어를 일종의 '사건'으로 경험했던 개인사(個人史)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문제제기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는 수년 전 대입 수능 고사 언어영역 출제위원으로 일했을 때 이야기다. 나처럼 국어교육이나 국어 연구와 무관하게 살고 있던 한 사회학도에게 언어 영역 시험 문제 공동 출제의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언어 영역을 국어학자나 국문학자들이 독점하고 있

* 본 연구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주최 제9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2007. 10. 27)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사회학 전공, sangin@snu.ac.kr

지 않다는 점은 — 사실은 과점(寡占)이었다 — 대단히 반갑고 다행스러웠다. 그런데 막상 출제위원들이 함께 모여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했다. 우선 시험문제 개수(個數)가 세부 전공 분야 별로 철저히 안배되었다. 언어 영역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체가 아니라 어학과 문학, 고문과 현대문,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영역 구분에 의거하여 구획화(區劃化)되고 파편화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밥그릇 싸움’ 같았다. 또한 문학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언어 외적(外的)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문화적 혹은 예술적으로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가령 해당 작가에게 친일이나 친군부 독재의 혐의가 있으면 시험 문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사적인 것이다. 나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신문에 잡문(雜問) 혹은 칼럼을 쓰고 있다. 비록 글쓰기의 보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재주와 능력이 없어 매번 너무나 고통스럽게 글쓰기에 임하는 형편이다.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강호(江湖)의 소위 ‘우리말’ 전문가들로부터 종종 혹독한 비판을 받곤 한다. 신문에 실린 내 글이 며칠 후 새빨강게 고쳐져 되돌아 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한없이 부끄럽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하거나 승복하기 힘든 경우도 솔직히 없지만은 않다. 구어체(口語體)를 꾸짖고, 일본식 한자를 지적하며, 영어식 문장을 야단치는 전문가들의 충고나 검열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되묻고 싶을 때도 있다. ‘우리말과 우리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쓰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고, 내가 쓰는 글은 ‘우리글’이 아니어서 결국 나는 ‘우리’에 속하지 못하는 것일까?

II. 국내 한국학의 ‘민족 만들기’와 ‘근대 찾기’*

포괄적 의미에서 한국학은 “한국에 관한 지식의 체계” 전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적(國籍)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민족 간 경계와의 직접적 상관성도 약한 이공학 분야보다 — 아마도 건축학이나 조경학 등은 예외일 것이다 — “한국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전반”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한국학은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그 결과, 전자는 ‘국학’(National Studies), 후자는 ‘한국학’(Korean Studies)으로 한동안 서로 다른 이름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명칭에 있어서 국학과 한국학의 구별은 점차 사라져 최근에는 대개 한국학 쪽으로 수렴된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한국학 연구와 국외 한국학 연구 사이에 존재하던 학문적 목적과 정향(定向)의 차이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국외 한국학의 전통은 타자(他者)의 시선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말하자면 일종의 지역연구(Area Studies)에 가깝다. 이에 비해 국내 한국학은 한말의 ‘본국학’(本國學)에서 시작하여 일제시대의 ‘조선학’을 거친 다음 해방 이후 ‘국학’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웅변하듯이 다분히 주체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다. 물론 지역연구로서의 한국학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성이라는 뜻은 아니다.¹⁾ 그런 만큼 한국학의 국학적 전통은 나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 한국학과 국외 한국학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궁극적으로 학문 연구에 있어서 가치의 자유와 실천의 문제에 기인한다. 문제는 따라서 어디까지나 그 정도 여하일 텐데, 현재 상태의 국내 한

* 이 장은 전상인(200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지역 연구가 타자의 시선에서 상대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반드시 가치중립적이지는 않은데다가, 특히 그것이 강대국에 의해 주도될 경우 제국주의적 목적을 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학은 학문의 객관성이나 보편성 명제 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기 힘들 정도로 국학적 전통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학적 전통의 국내 한국학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근대’와 ‘민족’을 찾아내어 이를 증거 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대종(大宗)이다. 국내 한국학은 근대성의 기원과 뿌리가 우리 내부에 자생적으로 존재했음을 규명하면서, 우리 민족이 그러한 역량을 주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부하는 일에 일차적 존재 이유를 찾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와 민족을 대표적 키워드로 삼고 있는 몇 가지 지구적 차원의 거대 담론에 국내 한국학이 참여하고 있는 양상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유교자본주의론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먼저 내재적 발전론은 우리의 전통 속에서 ‘근대 찾기’를 시도한 초기 한국학의 눈부신 성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발전의 동인(動因)은 한국 사회에 내장되어 있었고, 17-8세기 경에는 그 맹아(萌芽)가 실제로 출현하였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만약 일체를 포함한 제국주의의 침략만 없었다면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근대 이행은 자체적으로 무난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은 해방 이후 식민사관의 극복을 역사적 목표로 설정했던 우리나라 역사학계 나름의 학문적 결의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 국내 사학계를 풍미한 민족주의 정신과 결합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사의 올바른 인식에 장애가 되는 모든 선입관과 이론을 속히 청산할 것”이 요구되었는가 하면, “식민사관의 극복은 사실(史實)에 대한 부분적 시정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오로지 새로운 한국사관의 수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되기도 했다.

요컨대, 내재적 발전론은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이행을 경험하던 무렵의 세계사적 추세로부터 한국이 결코 예외자나 낙오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내재적 발전론의 학문적 가치이다. 우선 내재적 발전론은 그것을 증명할 실증적 자료나 계량적 지표가 크게 부족하다. 또한 내재적 발전론의 자본주의 이해는 상품경제나 화폐경제에 국한될 뿐 마르크스적 의미의 공업주의(industrialism)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결과, 개항 이전 한국에서 자본주의 단초를 찾으려는 노력은 “오렌지 밭에서 사과를 찾는” 격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재적 발전론은 서구의 자본주의 이행 경험이 한국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보편적 내지 객관적 기준으로 설정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서양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서양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투쟁”에 가깝다.

한국인 스스로 자본주의 이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학문적으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조선조의 본질과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조선왕조와 그 사회는 어디까지나 재분배경제에 기초한 도덕사회”였기에 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외부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잘못 껴어진 첫 단추인 것이다. 자본주의는 봉건제 유럽의 특수한 배경과 조건, 그리고 역학관계가 빚어낸 역사의 우연한 부산물로서, 조선조와 같은 한국의 전통사회에 대하여 자본주의 이행을 위한 자체 능력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일은 민족적 긍지나 수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편,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 자본주의의 외부적 기원으로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주목하자는 주장이다. 그것은 해외 한국학 및 국내 한국학 일부에서 공히 제기되었고, 역사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도 논의에 동참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골자는 장기적 관점과 비교사적 시야에서 접근할 경우 한국의 일제시대는 자본주의 이행과 성장을 일정 정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러나 국내 유관 학계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비판의 핵심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지 않거나 기층 민중의 고통을 수반하는 경제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식민지 근대화

론 자체가 동서냉전 해체 이후의 자본주의 ‘승리사관’ 혹은 일본의 지역 패권주의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다분히 학문 외적(外的)이라는 사실이다. 먼저 자본주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민족과 민중은 핵심적인 변수도, 본질적인 기준도 아니다. 또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시장경제나 법치주의 등 일제가 도입한 근대적 제도가 한국의 자본주의 이행에 끼친 사회구조적 영향을 지적할 뿐이다. 시야를 세계사로 넓혀보면 식민지 근대화가 ‘이상적’ 방식은 물론 아니었지만 매우 ‘보편적’ 방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민족을 절대시하는 ‘헤겔의 유령’(Hegel’s Ghost)에 집단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소위 유교자본주의론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것의 핵심 요지는 유교로 대표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가 되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서구사회에 특유한 것으로 보았던 막스 베버(Max Weber)의 이론을 부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교자본주의론에 따르면 강력한 국가와 정치적 권위, 교육과 자기개발, 근검과 절약, 근면과 노동규율, 사회적 조화와 집단 지향성, 사회적 교양과 지식인의 역할 등에 대한 유교의 강조가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의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개신교가 맡았던 역할을 아시아나 한국에서는 유교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교자본주의론에 대한 비판은 문화론적 접근의 내재적 한계 및 유교와 자본주의 사이의 불분명한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유교자본주의론을 통해 베버의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 학문적인 흥미에 비해 학문적 실익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유교자본주의론은 서구의 이론이나 담론을 우리나라 학문 스스로 추종하

는 것에 불과하다. 개신교 윤리에 필적하는 유교윤리가 우리 전통 속에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본주의를 촉발할 수 있는 나름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베버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부지불식간 매몰되는 우를 범하고 말기 때문이다. 학문의 서구중심주의 자체는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유교자본주의론은 유감스럽게도 서구학계의 문제의식을 극복하기보다 강화할 뿐이다. 유교자본주의론은 우리 전통 속에서 ‘근대 찾기’를 시도하는 민족주의 정신의 발로이자 성과라는 점에서 학문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국내 한국학 연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다. 역사학 분야의 경우 국내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내부적으로만 들여다보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정두희, 1999:3, 7)이다. 그 결과, 민족주의에로의 지나친 경도는 “학문연구를 또 다른 의미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타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정두희, 1999:22-23). “민족주의 그 자체는 하나의 규범적인 가치”로서, 국내 사학계에서 “한국민족주의는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일종의 성역”이 되어 있다(김성보, 2000:290).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보수 진영 학계보다 오히려 민족주의와 결합한 진보·좌파 진영에서 더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밝히고, 모순의 지점을 지적해내고 변혁의 과제를 제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김진균, 1997:217-240)이 대표적이다. 미국에 의한 우리나라 학계의 지적 ‘식민화’를 거론하며 이른바 ‘주체적’ 학문이나 ‘주체적’ 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학술단체협의회 엮음, 2003 볼 것).

Ⅲ. 한국학과 한국어문학

국내 한국학의 ‘민족 만들기’와 ‘근대 찾기’는 우리말과 우리글 연구와 교육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닌 듯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는 민족주의 논리 속에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성역화 되어 있다.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라는 식의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것은 차라리 순진한 편이다(예컨대 김영옥, 2007). 과연 언어 사이에 우열이 있으며 그것을 비교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의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한국어와 한민족을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위 ‘영어 공용화’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예컨대 북거일, 1998) 나타난 부정적 반응 속에 잘 드러난 바 있다. 어떤 국어학자는 영어 공용화 제안을 “과잉 세계주의의 천박성”이라 비판하면서 1천 년 전 신라가 한자 수입 및 송배를 통해 “우리 문화와 민족의 자주성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렸던” 경험에 비유하였다.²⁾ 어떤 국사학자는 영어 공용화 논리 속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국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없다”고 비판하였다.³⁾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언어는 바로 그 민족”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다(김진호, 2005:2). 정치학자이자 한글운동가인 어떤 이가 최근 우리 사회의 영어 열풍이 동반하고 있는 국어 경시 경향을 간단히 “민족적 자아의 상실과 왜곡” 현상으로 단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김영명, 2001:220). 하지만 문제는 ‘언어가 곧 민족’인지를 따지기에는 민족의 개념과 범주 자체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명료하다는 점이다. 민족이 초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실재가 아니라는 사

2) 남영신,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고?」, 『조선일보』, 1998.7.6

3) 한영우, 「지구제국은 강대국 희생사형이다」, 『조선일보』, 1998.7.9

실은 학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민족은 동일한 언어를 통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앤더슨, 2006) "역사적 변화에 열려 있는 사회적 실재"다(임지현, 1999:82). 한국사에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단일민족의 개념이 태동한 것은 중화주의가 쇠퇴하는 자리에 일본 제국주의가 부상하던 20세기 초반의 일로써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슈미드, 2007). 그리고 2007년 대한민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로부터 단일민족을 강조하지 말 것을 권고 받은 나라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한민족을 만들기 위해 한국어는 오·남용(誤·濫用)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민족정신이 있어서 그 정신을 담을 그릇으로 한국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민족정신을 만들기 위해 한국어에 민족정신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탁석산, 2004:79).

한국어가 한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국어국문학 내지 국어교육학의 역할은 따라서 비판적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 어떤 한문학자 — 혹은 국문학자 — 는 민족주의와 근대가 국어학과 국문학을 구성하고 서술을 강제했다고 주장한다(강명관, 2007:4). 그에 따르면 20세기 초에 시작된 국어학 연구는 "오로지 조선어만을 말하고 쓰는 동일한 국민-민족을 만들고자 한 민족주의의 기획이었다"(강명관, 2007:24). 국문학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국문학사는 순수와 우월을 전제로 하는 민족중심의 국문학이며, 그러한 국문학이 한국문학의 근대적 이행문제를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는 태도는 국사학 분야가 논의했던 내재적 자본주의 발전론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사회의 영역에서든 문학의 영역에서든 근대를 향한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경로는 "그것의 객관적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존재해야한 하는' 당위"였기 때문이다(강명관, 2007:106).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어학과 국문학의 교육과 연구가 '민족 만들기'와

‘근대 찾기’라는 역사적 사명에 몰두한 결과는 다음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 우선 국어의 이데올로기적 규범화이다. 이 땅의 모든 화자(話者)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전체 언어영역에서 동일한 언어 규범을 사용하도록 기획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국어체제’의 등장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전(全)지구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어’라는 제도와의 이념은 보다 직접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었다. 일본어라는 지반이 확고하게 존재한 후에 국어라는 건축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국어라는 화려한 첨탑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토대가 되는 ‘일본어’의 동질성을 시급히 갖추었다”(이연숙, 2006:17-18). 국가주의에 의한 국어체제의 등장과 공고화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식민지 경험과 독립국가의 건설을 배경으로 하여 국어는 민족 프로젝트 차원에서 성역화된 것이다. 특히 각급 학교의 국어 교과서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국민 만들기’를 위한 핵심적 도구로 작용했다(강진호 외, 2007).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국어의 국가 기획적 성역화 현상에 관련하여 국어교육 및 연구 집단의 역할 또한 결코 완전히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어체제의 성립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 및 연구영역이 점차 전문화, 권력화, 관료화되는 경향을 드러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국어체제와 관련하여 국가권력과 국어 관련 이익집단 사이의 관계가 결코 공모적(共謀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국민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국어의 교육 및 연구 집단이 구가하는 직업적 권위주의는 정치나 경제 등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의 해당 전문가 엘리트주의를 크게 능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어 관련 이익 당사자들은 국어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을 계도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너무나 당연히 자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국어에 내포되어 있는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그것에 편

승하고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그 결과, 태생적 모국어이자 사회적 공용어인 국어는 언중(言衆)들 사이에 자유롭고 편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IV. 한국어와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미래

그렇다면 한국학의 미래 발전과 관련한 한국어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과연 어떤 것일까? 먼저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당위적으로, 또한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범적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일종의 ‘관습 헌법적’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언어는 곧 민족”이라는 명제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명제는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가령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 나라 고유의 민족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도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은 유별나기만 하다. 해방 무렵 우리나라에서 30%에 이르렀던 일본어 보급률이 반드시 일제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한국인을 만들어낸 것 또한 아니다. 일본어는 조선인에게 각성과 저항의 언어이기도 했던 바, 일어 서적을 통해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 성장하는 경우도 허다했다(손준식 외, 2007 불 것).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어가 체제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사용된 사례는 인도나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다(多)인종사회·다(多)민족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그런 만큼 혈통은 물론 언어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

을 확인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국가나 민족 그 자체를 백안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를 풍미하는 것은 이른바 ‘한민족 민족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족주의’다(강원택, 2006). 대한민국의 공통분모는 더 이상 혈통도 아니고 언어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어는 ‘한민족의 모국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재인식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포용하고 예우하는 노력은 언어의 영역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인종과 무관하게 민족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국적 한국인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언젠가 한국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가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할지도 모른다.⁴⁾ 그런 만큼 이제부터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 일반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국문학과와 소멸’ 현상도 반드시 안타깝게 볼 일은 아니다.⁵⁾

둘째, 한국어 교육과 발전문제에 있어서 한국어의 외연확대와 잡종강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순수주의를 지향하는 ‘빨셈의 한국어’가 아니라 ‘덧셈의 한국어’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순혈을 지키느라 전문가들이 온실이나 우리 속에 가두고 지키는 언어는 더 이상 살아 있는 언어로 보기 어렵다. 원칙은 있되 발군의 ‘글쟁이’들에 의한 창조적 변용은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어법에 한 치 어긋남이 없는 글은 좀 무표정”한 것이고⁶⁾ 말이 진화하여 결국 “적자(適者)인 것으로 판명되면 생존할 것” 아니겠으며,⁷⁾ 결국 “문제는 소통”아니겠는가?⁸⁾ “문법도 법이지만 법은 다 지키면

4) 이런 점에서 1980년대 일본에서 제기된 영어공용화론이 사실은 내셔널리즘의 요소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일본은 장차 다언어·다민족 이민국가가 되었을 때 “일본어와 영어라는 두 바퀴로 공식 규제를 하려는” 목적을 고려했다는 것이다(이연숙, 2001:308).

5) 최근 국문학과와 소멸 현상에 대해서는 「국문학, IT세대 맞춰 대변신」, 『조선일보』, 2005.7.9, 「국문학과는 소멸되는가」, 『주간조선』, 2007.9.17 참조

6) 이운기, 「병개하면 안 되나요?」, 『중앙일보』, 2005.7.20

바보”아니겠는가 말이다.⁹⁾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 지역 말 연구모임인 ‘땃말두레’가 표준어 중심 정책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언어 권력집단에 대한 이유 있는 항거로 보인다. 영어(he, she)의 일본어 번역을 다시 억지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나 ‘그녀’라는 말을 결연히 거부하는 어떤 우리말 지킴이나¹⁰⁾ 자동차에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물건처럼) ‘실는다’는 표현이 “영어의 동사 ‘carry’가 퍼뜨린 병원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국어국문학자가¹¹⁾ 과연 세계화와 정보화라고 하는 문명사적 대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른바 ‘외계어’를 포함하여 오늘날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휴대전화 자판을 통해 사용하는 ‘TT_TT’나 ‘*^_^*’ 따위의 이모티콘(emotion+icon)을 언제까지 이단시할 것인가? 한국인들이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언어 아닌가? 결국, 한국어 교육이 말아야 할 역할은 나쁜 국어, 틀린 국어에 대한 판단과 규제가 아니라 좋은 국어, 바른 국어를 위해 표준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차체에 한국어의 경계 자체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어에 민족의 혼이 있다는 주장이 가령 한자나 한문에는 민족 혼이 없다는 식의 결론으로 비약해서는 곤란하다. 민족어인 한국어를 신성시하는 나머지 과거 수 천 년 동안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한번도 타자의 언어로 인식되지 않았던 한문을 이른바 ‘국문운동’에 따라 줄지에 ‘이 민족의 언어’로 규정한 일은 것은(강명관, 2007:24-25) 한국어의 왜소화와 한국학의 빈곤화를 자초한 처사였다. 일본어의 잔재를 거두어 한국어의 순수성을 지키지는 취지도 그 자체는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가? 민족주의, 사회학, 근대, 개인, 자유

7) 이윤기, 「진화하면 안 되나요?」, 『중앙일보』, 2005.8.12

8) 이윤기, 「말이어, 넥타이를 풀어라」, 『중앙일보』, 2005.10.1

9) 인터뷰, 「신동엽 창작상 받은 문단의 별종 박민규」, 『조선일보』, 2005.8.20

10) 초대석, 「우리글 지킴이 한평생 이수영 술애울 국어순화연구소장」, 『동아일보』, 2006.4.1

11) 김정우, 「영어에 오염돼 가는 한국어」, 『주간조선』, 2006.4.10

등의 어휘들 까지도 한국어 사전에서 제거해야 할까. 인도 영어가 있고 싱가포르 영어가 있어 영어가 보다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듯이, 언어의 본질은 '순수'가 아니라 '혼성'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라말의 70% 이상이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만이 우리말이라고 고집한 결과는 우리 말 자체의 빈약이다. 그리고 “말이 부족한 나라에서 수준 높은 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¹²⁾ 그리고 양서가 적은 나라의 문화적 수준이 결코 높을 리 없다. 한글과 일어, 혹은 영어 사이의 ‘칼 같은’ 구분과 구획이 일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제 한글정책과 한국어 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한글을 ‘온실’에서 ‘뜰판’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물론 여기서 영어를 공용화하자거나 한문을 숭배하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른바 ‘모어(母語) 폐시미즘(pessimism) 혹은 염세주의’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말하자면 ‘인바운드(inbound)’ 언어정책 대신 ‘아웃바운드(outbound)’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어에 국경의 담을 높이 세워 우리말을 지키고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이 세계를 향해 적극 진출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보다 아쉽다. 언어의 힘은 언어 자체의 과학적 우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언어 외적 요인들로부터 만들어진다. 세계굴지의 경제 강국으로서 지구 전역에 퍼져있는 한민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국어는 민족어에서 세계어로 탈바꿈할 필요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다.

2006년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 역량은 아프리카 52개국 8억 인구의 총 수출액보다도 크고, 아메리카 35개국 4억 인구의 총 수출량 보다 많다. 한

12) 조 순, 「독서는 나라의 초석」, 『경향신문』, 2007.3.23

국어의 무대가 국내에 안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북한 동포 2,200만 명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 걸쳐 7,500만 명에 이르는 한민족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한국어가 민족어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학의 외연과 내포 또한 크게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다. 한국어는 한국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유일한 언어임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학이 한국학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핵심적 관건은 한국학의 세계적 소통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은 언어교육 일반으로 확대·승화되어 그 과정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2007),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 출판.
- 강진호(2007), 『국어교과서와 국가이데올로기』, 글누림.
- 강원택(2006),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동아시아연구원.
- 베네딕트 앤더슨(1983), 윤현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2006), 나남 출판.
- 김성보(2000), 「21세기의 한국현대사 연구방향」, 『한국사론』 30집, 국사편찬위원회.
- 김영명(2000), 『나는 고발한다 : 김영명 교수의 영어 사대주의 뛰어넘기』, 한겨레신문사.
- 김영명(2001), 「세계화와 언어문제」, 『아시아문화』 17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본 논문은 2007. 11. 8. 투고되어, 2007. 11. 15.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김영옥(2007), 『한글-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 루덴스.
- 김진균(1997), 『한국의 사회현실과 학문의 세계』, 문화과학사.
- 김진호(2005), 『한국어 세계화와 한국어 교육』, 제22회 한말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2005.7.15, 춘천교대 강의동).
- 복거일(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지성사.
- 손준식·이옥순·김권정(2007), 『식민주의와 언어』, 아름나무.
- 신지연(2007), 『글쓰기라는 거울』, 소명 출판.
- 앙드레 슈미드(2007),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 이연숙(2001), 『일본의 영어공용어화론』, 『아시아문화』 17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이연숙(2006), 고영진 옮김,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인식』, 소명 출판
- 임지현(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 전상인(2007), 『해외 한국학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엮음, 『해외 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pp. 14-28.
- 정두희(1999),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국학자료원.
- 최주열(2006), 『“신한류” 정책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비교한국학』 14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 탁석산(2004), 『한국의 민족주의를 말한다』, 웅진닷컴.
- 학술단체협의회 엮음(2003),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 국문초록

한국학, 한국어, 한국어교육

전상인

국내 한국학에는 '민족 만들기'와 '근대 찾기'를 위한 국학적 전통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근대화론, 그리고 유교자본주의 논쟁에서 잘 확인된다. 한국어문학과 한국어 교육 역시 이와 같은 국내 한국학의 연구 경향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국어의 이데올로기적 규범화 경향이 두드러져 있다. 또한 이른바 '국어체제'의 성립과정에서 한국어 연구 및 한국어 교육 관련 집단의 권력화 및 관료화 현상이 나타났다. 향후 한국어는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한민족의 모국어'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력의 신장 및 해외 거주 한인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어는 민족어에서 세계어로 거듭 태어날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주제어] 한국학, 한국어, 한국어교육, 민족주의, 세계화

■ Abstract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Jun, Sang-In

Korean studies within Korea over the last a few decades has overexerted itself for 'nation building' and 'modernity searching'. This is well demonstrated in the theories on 'immanent capitalist development,' 'colonial modernization' and the debates over 'Confucian capitalism. Educ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Korean language has also something to do with such trend of Korean studies since there has been formed a strong tendency to normalize the Korean language ideologically. Moreove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there appeared the phenomena of power-orientedness and bureaucratization of the groups involved in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rom now on, however, the Korean language needs to be redefined as 'common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the mother tongue of the Korean ethnic group' for the sak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addition, along with the growing national power of Korea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s residing abroad, we are oblig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for the Korean language to be born again from an ethnic language to a global language.

[Key Words]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Education,
nationalism, globalization